▶▶ 매일 INDEX

7면
군산시 자원봉사자들
코로나19위기상황에 '희망'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음 2월 17일) 제2492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코로나19 '전주형 상생실험' 가속도

전주시, 위기극복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원
긴급 추경 543억원 편성, 전주시의회 심의 요청

전주시가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했다. 또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40억 여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 극복에 나섰다.

〈관련기사 4면〉

시는 지난 9일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한 긴급 추경예산(안) 543억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이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시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발생 시 더 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는 이들 취약계층은 5만 명 정도로,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 자체 예산 25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6대 기본원칙으로는 △위기시민 지원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20억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자체 예산 27억5000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5000만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담았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날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입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비정규직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위소득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정성스럽게'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린 10일 오후 임실군의 한 고추농가에서 농민들이 정성스럽게 고추모종을 옮겨 심고 있다. 〈사진=임실군 제공〉

도내 신천지 1만 3273명 유증상 93.7% 검사 완료

응답 99.8%…유증상 554명 중 양성 1명 · 음성 519명

전북도는 지난 9일까지 도내 신천지 신도 1만3,273명를 조사해 554명을 유증상자로 확인했고, 검사결과가 나온 520명 중 양성 1명을 제외한 519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은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 중이다.

9일 조사에서 유증상자는 24명이 추가돼 총 554명으로 늘었고, 음성판정으로 확인된 인원은 18명이 증가한 520명이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인원은 22명이며, 나머지 12명은 조속히 검사할 예정이다.

시군별 유증상자는 전주 300명(+13), 군산 136명(+6), 익산 57명(+3), 정읍 15명, 남원 11명(+2), 김제 10명, 완주 14명, 임실 1명, 고창 3명, 부안 7명이다.

대구·경북 방문자로 확인된 인원은 70명이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유증상자로 조사된 인원은 20명으로 19명은 음성, 1명은 검사 예정이다.

도는 또 종전 미연락자 50명 중 9일 20명이 연락돼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은 3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4명은 타 시도 거주자로 파악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이관 협의 중이며, 나머지 26명(0.2%)은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 협의 후 지속 연락을 시도 중이다.

아울러, 증상이 없는 신천지 신도 1만2,753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 중이다.

도는 정부명단 외에 신천지 추가 명단 확보를 위해 도민의 전화 제보를 받아 406명의 추가명단을 확보해 조사했다.

9일까지 전화 제보를 통해 접수된 명단은 2,385명이며, 이중 중복 명단 등을 제외한 조사대상은 406명으로 전화조사 시 응답한 171명 중 신천지 신도는 총 11명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대구·경북을 방문한 사람은 없었으며, 신천지 신도 11명은 무증상으로, 2주간 증상 유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내 신천지 신도가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유증상자로 응답하고, 코로나19 검사받는 인원이 늘고 있다"며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만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유증상자와 미응답자들을 조속히 파악하는 한편 도민제보로 추가 확보한 명단 또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코로나19 대처" 전북체육회 · 시군체육회 공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체육회와 시·군체육회가 머리를 맞댔다.

10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이날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간담회를 열고 당면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와 제57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관련 대책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다음달 29일 전주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전북도민체전은 5월15일부터 사흘간 남원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의견을 수렴한 전북체육회는 조만간 시군체육회장 간담회와 전북도, 대회 개최지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대회 연기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인 위생 관리 철저, 체육인 선거 중립(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도 논의됐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각 기관과 논의를 통해 최상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 '코로나 사각지대' 환경분야 사업장 상생활력 도모

전북도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환경분야 사업장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여러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도는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정기지도점검대상 527개소 중 소규모·영세사업장에 해당하는 5종사업장 62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코로나 19 비상사태 종료시까지로 유예하고,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527개소 중 1~4종 사업장(465개소)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급격하게 침체된 지역경제 및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주차료)를 일정기간 무료 개방하도록 해당 시군에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상·하수도 및 가축분뇨 분야 환경업체 종사자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김진성 기자